

성신여대 2021학년도 모의 인문 1번

- ☞ 제시문 <가>에 기술된 '감염병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사생활 제한 정책'은 제시문 <나>의 관점 ①과 관점 ② 각각에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제시문 <나> ①, ②의 관점에서 어떻게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가능한지 각각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800~1,000자)

<가>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 인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유행병(pandemic)으로 야기된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가 강행한 봉쇄조치 없이도 감염병 전파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감염예방 물품과 생필품의 매점매석, 사재기가 횡행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경우는 마스크를 사거나, 투표할 때뿐이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세 가지 비결인 '검사', '추적', '억제'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중순에 전 세계를 향해 '검사, 검사, 검사'를 애타게 주문하기 몇 주 전부터 한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12,000명을 검사할 능력을 갖추었고,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와 워크인(walk-in) 등의 방식을 통해 10분 안에 무료로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24시간 안에 피검사자의 휴대전화로 전달되었다.

한국이 감염병 확산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올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검사는 물론이고 접촉자를 추적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모바일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들의 최근 동선을 밝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휴대폰 GPS 추적, 감시 카메라 기록,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보조수단으로 동원하였다. 이토록 세밀한 추적 덕분에 한국질병관리본부는 감염자가 확진 판정 전에 다녔던 곳을 대중에게 낱낱이 실시간으로 경고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경고 안내문에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그리고 방문했던 장소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일각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인권이지만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사생활 제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견고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건강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임의적 결정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5월에 발행한 보고서 『코로나19 억제 정책: 팬데믹 대응을 위한 한국의 ICT 활용 사례』를 보면,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신속한 검사, 재빠른 추적, 원활한 치료를 통해 “20일 만에 성공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증가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결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나>

① 우리는 수많은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와 같은 의무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행위의 가치가 본래 정해져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행위는 본래 옳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본래 그르다. 즉 인간의 어떤 행위는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해 옳고 그름이 온전히 결정되며, 따라서 그 행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영향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은 것이므로,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당면한 상황에서 갖게 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의무에는 각 개인이 져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국가가 져야 할 의무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면 그것을 목격한 개인은 자신이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구조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하며, 국가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이 개인에게 닥치지 않도록 제도를 갖추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여럿일 수 있으며 심지어는 그 의무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조하려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타인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해야 하는 의무와 충돌하게 된다. 물론 이럴 경우 두 의무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온갖 방안을 먼저 강구해보겠지만 그럼에도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관련된 의무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곧 나중 순위의 의무를 최소한으로 위배하면서 앞선 순위의 의무를 완수할 방안을 찾아 이를 실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②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하기도 한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의존하며, 따라서 올바른 행위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행위의 가치는 그 자체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도덕적 문제 상황은 다양하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의 가치는 각 상황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결과의 산출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는 수단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면,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들을 먼저 모두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행위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만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무엇이 가장 좋은 결과인지에 대해 일치된 답을 찾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어떤 이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다고 하고, 다른 이는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둘째, 가장 좋은 결과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를 낳기 위해 현 상황에서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일치된 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는 데 모두 동의하더라도, 지금 직면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지, 다시 말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지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또한 같은 선택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허다하므로, 각 상황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행위와 결과를 달리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얼마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 제시문 <가>에 기술된 '감염병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사생활 제한 정책'은 제시문 <나>의 관점 ①과 관점 ② 각각에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제시문 <나> ①, ②의 관점에서 어떻게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가능한지 각각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800~1,000자)

[독해]

(가) 한국은 선진적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 분석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나) 1) 의무론적 윤리: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이다.

다만, 의무 간 충돌이 발생하면, 우선적 가치를 위해 차선적 가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2) 결과론적 윤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위이다.

다만, 무엇이 가장 좋은 결과인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

[논리평면] 가치추론, 견해(논쟁)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나)①	의무적 가치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	더 중요한 가치를 우선해야	G
대상	(가)	국민의 안전 Vs. 사생활 보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생활 제한	g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한 가치라면	b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나)②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윤리적인 행위	G
대상	(가)	국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킴	한국 정부의 행동은 윤리적으로 정당	g
		사생활 침해로 인한 중대한 악영향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 가능	b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재반박	사생활 보호 Vs. 국민의 안전	사생활 보호 < 국민의 안전	G
대상	반론		사생활 보호 > 국민의 안전	b

[예시답안] 997자

문단	기능	내용
1 대상	대상-핵심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선진적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상황을 통제했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대상-상술	(가)에 나타나듯, 한국은 모바일 기술을 통해 확진자의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했다. 물론,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2 평가	주장	이러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 의무론적 윤리의 관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기준	제시문 (나)에 따르면, 올바른 행동이란 의무에 따른 행동이고, 서로 다른 의무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더 우선하는 의무를 위해 차선적 의무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적용	따라서, 한국이 감염자의 개인 정보를 공공에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정당하게 제한시킨 경우이므로 윤리적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3 평가	주장	물론, 같은 논리로 정부를 비판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적용	안전을 빌미로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경중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4 평가	주장	한편 결과론적 윤리의 관점에서도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기준	(나)에 따르면, 올바른 행위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 정의할 수도 있다.
	적용	이에 따르면, 한국은 결과적으로 선진적 감염 통제를 이뤄내고 있으므로 그동안 취했던 조치들도 윤리적으로 옹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평가 (예상 반론)	주장	물론, 결과론의 논리로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다.
	적용	필요한 조치였다는 식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선례가 축적되면 우리 사회는 점차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힘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자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일부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6 견해 (재반박)	주장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기준	감염자의 사생활이 국민 전체의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단순한 진리이다.
	적용	감염자 정보 공개로 손상되는 자유가 있다고 해도 이를 통해 지켜지는 국민의 생명보다 귀중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재주장	결국, 우리 정부는 다양한 논란 속에서도 훌륭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올해 인문계열 모의 논술 고사는 지난 3년간의 출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통합 사회>,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경제>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용하게끔 함으로써,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고차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하나의 문제 사례를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와 제시문을 배치하고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갖춘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고등학생 수준의 인문적 소양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이번 논술 고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과 사생활 보호’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응시자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검사, 추적, 역제의 방법을 적극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평가하되, 도덕적 판단의 대표적인 두 원리인 의무주의와 결과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해 보도록 하였

다. [문제1]과 [문제2]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각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각각의 논지를 전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대학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는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가디언, 뉴욕타임즈 등에서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한 기사, 그리고 해외에 배포한 한국 정부의 보고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독일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발췌하여 작성되었다. 제시문은 한국이 ‘검사’, ‘추적’, ‘억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던 데는 잘 갖춰진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큰 역할을 했음을 상세한 사례와 함께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문제1, 2와 연관된 주제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GPS와 신용카드 거래 내역 추적, 확진자 방문 장소 공개 등은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을 소개하고 있다. 수험생은 제시문으로부터 첫째, 소개된 한국 정부의 조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사생활 보호에 위협이 되는지, 둘째, 그러한 위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마만큼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 사생활 침해의 허용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도덕적 판단의 두 가지 원칙으로 빠짐없이 소개하는 의무주의와 결과주의를 발췌·수정하고, 수험생의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두 원칙의 실제 적용 과정을 보충하여 기술한 것이다. 내용을 보충하면서 <토론수업을 위한 응용윤리학>(바루흐 브로디)을 참고하였다.

제시문 <나> ①은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와 연관된 각종 의무들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무주의 도덕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의무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도덕적 판단을 수행한다. 첫째, 당면한 상황에서 완수해야 할 의무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둘째, 하나의 의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무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살펴본다. 셋째, 만약 어떤 방법으로도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어느 의무가 우선하는지 순위를 결정한다. 넷째, 나중 의무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앞선 의무를 완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이를 수행한다. 수험생은 이 절차를 숙지하고, 제시문 <가>의 상황에서 국가가 하여야 할 일을 결정하는 데 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 사이에서 어떤 절차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 ②는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당면한 상황에서 가져올 결과가 가장 좋으나 아니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과주의 도덕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결과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도덕적 판단을 수행한다. 첫째, 당면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들을 모두 찾는다. 둘째 각 행위가 가져올 결과들, 다시 말해 치러야 할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하여 어느 행위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지 판단한다. 셋째, 가장 좋은 결과를 낳으리라 예상되는 행위를 확정해 이를 수행한다. 수험생은 이 절차가 의무주의와 어떻게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제시문 <가>에 소개된 한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데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결과주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것이었는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다른 조치는 없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평가의 관건임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문항해설]

본 문제는 제시문 <나> ①, ②에 소개한 서로 다른 도덕 원칙과 판단 절차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이를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 즉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사생활 제한 조치에 적용하여 그 조치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각각의 근거가 ①과 ②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제시될 수 있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각각의 근거들을 수험생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이끌어낼 것을 요구한다.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구성의 체계성과 내용의 완결성 및 문장 표현력을 통해서 응시자의 이해력,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 <나> ①, ②에 소개한 두 도덕 원칙과 그 원칙에 따라서 달라지는 판단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 즉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한 것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한국 정부 당국이며, 판단되는 행위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정부 당국의 조치이며, 그 조치의 핵심은 감염병 확장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이 답안에서 먼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둘째, <나> ①의 관점과 판단 절차에 따를 때 한국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의무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완수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갖게 되는 대표적인 의무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는 다른 한편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시 말해 국민 건강 보호 의무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 의무라는 국가의 두 의무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 후반부는 첫 번째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두 번째 의무를 일부 포기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 정부 당국은 의무 충돌 상황에서 첫 번째 의무가 두 번째 의무가 우선하며 따라서 첫 번째 의무를 위해 불가피한 만큼은 두 번째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취한 개인 정보 수집(GPS 추적 및 감시카메라, 신용카드 사용 내용 확인) 및 개인 정보 공개(확진자의 성별, 나이, 방문 장소의 이름과 주소) 역시 견고한 법률 체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그러한 수준에서의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무주의자의 긍정적 평가는 한국 정부가 밝힌 의무 우선순위와 엄격한 법률에 의거한 한국 정부의 개인 정보 공개 조치 모두 적절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여러 갈래에서 가능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무보다 두 번째의 사생활 보호 의무가 더 우선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도 있으며, 우선순위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실제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과도하여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거나 또는 반대로 과소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첫 번째 의무 수행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의 답안에서는 의무주의자의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근거가 잘 드러나야 한다.

셋째, <나> ②의 관점과 판단 절차에 따를 때 한국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취한 사생활 제한 정책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또 앞으로도 가져올 것인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강제적 봉쇄 조치와 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시각에서 보자면 결과주의자는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조치들도 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긍정 평가의 근거는 더욱 충실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 평가의 근거 역시 분명해진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을 어떤 형태로든 보여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국 정부의 조치는 사생활 침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으며, 좀 더 세부적으로는 사생활 침해 요소를 더 축소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거나 반대로 사생활이 더 침해되더라도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 공개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등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의 답안에서는 결과주의자의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들이 잘 드러나야 한다. 결과주의적 비판에서는 특히 현재의 조치나 정책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대안적 조치나 정책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설득력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넷째, 한국 정부가 펼친 정책에 대해 <나> ①, ②의 관점에서 가능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근거들을 정리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근거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자신의 견해가 긍정적인 쪽이라면 앞에서 밝힌 긍정의 근거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의 근거를 반박하는 자기 나름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며, 반대로 부정적인 쪽이라면 반대쪽 방향으로 자기 나름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견해와 근거를 서술할 때에는 그것이 앞서서 정리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근거들을 종합할 때 뒤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논의 선후의 연관성이 잘 드러나도록 답안이 서술될 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채점기준]

문항	배점	세부 내용
문제1	5	제시문 <나> ①, ②의 도덕 원칙과 판단 절차를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 즉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사생활 침해 정책’에 적절히 적용하였는가?
	15	제시문 <나> ①의 관점과 판단 절차에 따를 때 한국 정부의 조치를 어떤 근거로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적절히 보여주었는가?
	15	제시문 <나> ②의 관점과 판단 절차에 따를 때 한국 정부의 조치를 어떤 근거로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적절히 보여주었는가?
	10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나> ①, ②의 관점에서 내용을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근거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었는가?
	5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1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나> ①, ②의 도덕 원칙과 판단 절차를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 즉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사생활 침해 정책’에 적용하기

둘째, 제시문 <나> ①의 관점과 판단 절차에 따를 때 한국 정부의 조치를 어떤 근거로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셋째, 제시문 <나> ②의 관점과 판단 절차에 따를 때 한국 정부의 조치를 어떤 근거로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넷째,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제시문 <나> ①, ②의 관점에서 내용을 긍정적, 부정적 평가의 근거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기

1) 첫째 부분

- 제시문 <나> ①, ②에 소개한 두 도덕 원칙과 그 원칙에 따라서 달라지는 판단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였는지 점검한다.
- <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이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한국 정부 당국의 정책적 조치이며, 그 조치의 핵심은 감염병 확장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2) 둘째 부분

-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국가나 정부가 완수해야 할 의무 및 이와 상충할 수 있는 의무를 적절히 나열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국가가 가져야 할 의무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 당국의 조치와 시각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 당국은 국민 건강 보호 의무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 의무라는 두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의무가 두 번째 의무가 우선하며 따라서 첫 번째 의무를 위해 불가피한 만큼은 두 번째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한국 정부가 실제로 취한 개인 정보 수집 및 개인 정보 공개 절차와 행위에 대해 의무주의자가 긍정적 및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각각의 근거를 제대로 밝히고 있는지 점검한다. 특히 부정적 평가는 의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 정부의 구체적 조치 방법에 대한 이견 등 여러 갈래에서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3) 셋째 부분

-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취한 사생활 제한 정책이 다른 어떤 가능한 정책보다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또 가져올 것인지 여부가 한국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한다.
- 한국 정부가 실제로 취한 개인 정보 수집 및 개인 정보 공개 절차와 행위에 대해 결과주의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밝히고 있는지 점검한다.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가능한 조치들도 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답안에 설득력 있게 서술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 한국 정부가 실제로 취한 개인 정보 수집 및 개인 정보 공개 절차와 행위에 대해 결과주의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밝히고 있는지 점검한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이 어떤 형태로든 설득력 있게 논증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부정적 평가는 지금 정책이 초래할 더 나쁜 결과를 밝히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안겨줄 다른 조치를 제안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므로 이

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4) 넷째 부분

- 수험생 자신의 견해가 긍정적인 쪽이라면 앞에서 밝힌 긍정의 근거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의 근거를 반박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쪽이라면 그 반대쪽 방향으로 자기 나름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수험생 자신의 견해와 근거가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논의 선후 간에 연관성을 갖추었는지 점검한다.